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민자치 공약분석을 위한 질의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경쟁하는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이해와 정책개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 답변 내용은 월간주민자치와 유효한 방법을 통하여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1. 후보자

지역구	정당	후보자명
수영구	무소속	박 주 혁

2. 주민자치에 대한 기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주민자치의 필요성/중요성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란 스스로가 깨어나 거듭나야 한다.
대의명분을 지향하며 자주근면성은 좋으나 주민이 인정하고 공감하며 적극적 지지가 있을 때만이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난다.

2-2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주민자치의 실질화/현실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정치개혁이 급선무이다.
자치단체장이 공천제이며 당선 후도 당적을 유지하는 현 세태에서는 평등과 형평성이 거듭나기는 힘들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의 법률안이 제도적으로 마련 되어야 하는게 첫 번째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자치단체별로 조례 및 규칙을 통해서라도 내실화를 기여해야 한다.
모든 법률과 규칙에서 주민자치의 자립성의 조향을 별개로 만든다면 그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3.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이중의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정부와의 관계이며 주민과의 관계입니다. 주민과 관계가 없으면 주민회라 할 수 없으며 정부가 지배를 하면 자치회가 될 수 없습니다.

3-1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각 동마다의 10개 내외의 단체가 있다.

그 중에서 주민자치회가 으뜸이요. 이들이 마을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명감이 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자.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선 동에서 관여하는 바도 없으며 자치회장이 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적정한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는 권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며 접근성, 당위성, 타당성, 신뢰성 등에서 주민에 공감능력에서 나온다.

3-2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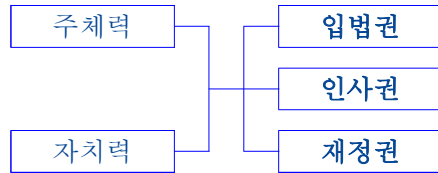
사실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문제가 꽤 멀게만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잘 알다시피 “정책이 현실을 견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부정 할 수 없다.

관선과 민선의 장단점이 엄연히 존재하듯이 재정권 등이 중앙집권적 법률의 제한으로 제일 크다 하겠으나 본인은 단체장의 주체적 의지가 더욱 크다 하겠다.

민/협력 부서는 필수요. 커뮤니티 센터가 관내에 존재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다.

주민자치회가 자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자치의 주체가 되어야하고 자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치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자치를 할 수 없고 자치의 능력이 없어도 자치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의 주체역량과 자치역량으로 주민자치회는 입법권과 인사권 그리고 재정권을 필요조건으로 합니다.

3-3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회칙으로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수시 이사회 및 중요의결사항 등은 총회에서 결정하여 주민자치회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건 당연지사다.
아울러 그 인사권의 재량 및 재정권등도 법률이 근거가 되어 뒷받침되어야 하나 본인은 주민과 주민자치회 및 동네의 다른 조직과의 견제와 균형이 되지 않는다면 필요이상의 남용도 불가피하므로 조직 내 기강확립은 확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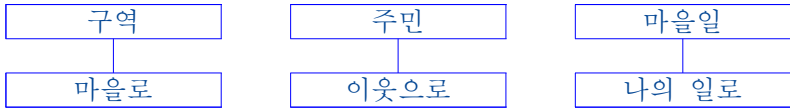
3-4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와 임원을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회원들이 선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인사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근거한 인사권의 재량인데 현재 재량이라는 요소에서 당위성과 타당성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다.
기타 정관에 따라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면 될 터 그러나 조직이 비대해 질수록 인사권의 재량은 줄여나가야 한다.

3-5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회비, 기부금, 수익 등)을 조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재정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사업이 가능하면 투명한 전/후회계감사와 회원들 간의 회비 등의 사용처뿐만 아니라 당위성이 지속적으로 재론되어야 하며 회계에 관한 지침 및 처리사항 등은 언제나 제고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어야 실질적 민주주의 주민 스스로가 대동단결이 될 것이다.
비영리단체의 보조금 사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 것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이보다 더 기쁘겠는가!
언제나 사단은 회계와 인사에서 나오는 법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의 구역을 마을로 승인하고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하고 지역의 일을 나의 일로 승인하여야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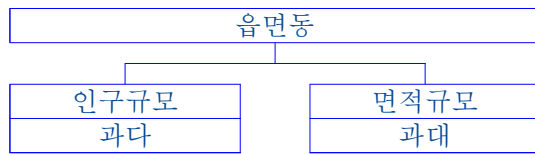
주민이 나의 마을로 승인하지 아니하면 주민자치가 아니며 주민이 이웃으로 승인하지 않아도 주민자치가 아니며 주민들이 나의 일로 승인하지 않아도 주민자치가 아닙니다. 주민자치회가 구역을 대표하여 마을의 공공을 구현할 때 비로소 주민들은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구역을 나의 마을로 승인하게 됩니다.

3-6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공공을 실현하는 지역조직으로, 주민의 공공을 실현하는 주민조직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성을 가져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대표성은 중요한 대의명분에 사명감과 헌신성이 전제가 되어야한다.
옛말에 “ 심청이는 누가 키웠느냐” 라는 말이 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회가 마을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 주민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공동체 역할을 했느냐를 다시 되짚어야 하는 시기이다.

주민자치회는 무보수 명예직인 대표와 임원이 운영하고 주민들도 무보수 비전임으로 참여

를 하여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의 읍면동의 인구 규모는 주민자치회의 적정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고 면적은 과대합니다.

3-7 주민자치회를 읍면동 구역에 설치하였을 경우에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회 대표/임원이 읍면동 구역에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가를 포함하여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규모와 면적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 농촌, 어촌 등 여러 형태의 지형과 면적 인구분포가 고려 대상이어야 한다.

구역이 넓고 크다면 관리가 힘들고 밀집형이라면 이해관계가 침해할 것이다. 표집 본을 두어 시행 후 차츰 적립해 가는게 바람직하다.

또한 자치회의 임원이 무보수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자치회를 행정계층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계층에 설치할 경우 주민자치회와 읍면동이 중복되어 대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리가 행정보조기구의 자격으로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주민자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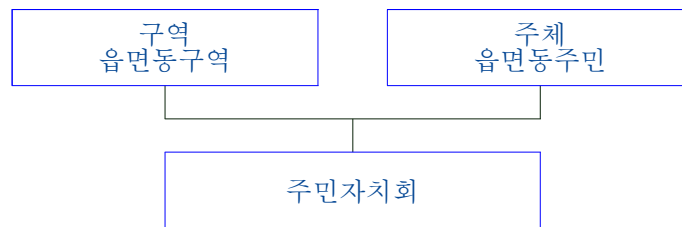
통리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면 지역밀착형이 가능하지만 이미 통리가 있습니다.

3-8 현행 행정 보조기구인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 리회로 혁신하는 것에 대해서 소신있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통/리라면 과거 반상회가 연상이 된다.
오히려 더욱 촘촘한 주민간의 결속과 공감의 시너지효과를 발휘 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의 유념해야 하는 것이 소외된 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과 리에서 논공행상을 정확해야하며 회원이 순회하며 임원을 맡을 수 있게끔 누구나가 직책이 부여 되는게 중요하다.

4.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주민자치회의 구역을 읍·면·동으로, 주체를 읍·면·동 주민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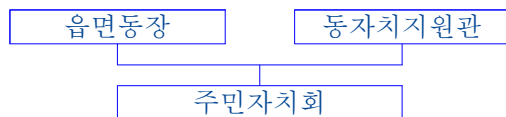


표준조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안)’(이하 표준조례)은 특별법의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을 빼버리고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4-1 모법인 ‘자치분권법’에서 정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인데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만든 표준 조례에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을 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책이 현실을 견인하지는 못한다.
 때론 주민의 의도와 다르게 또는 주민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만의 왜곡된
 담론이 오고 가기도 한다.
 그 지역의 몇 년간 이상 거주한 주민 및 사업체 등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
 는 게 마땅하다.
 해당행정구역안의 개정이 필요하면 적극추진하며 그 아래 조항에 읍. 면.
 동을 지정하자.

행안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면서 동자치지원관제도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
 동자치지원관의 임무는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기획 및 현장 지원, 주민자치회 구성 및 모임 네트워크 구성, 운영
 촉진, 자치계획 수립 및 운영 기획, 주민자치회 협의·수탁·자치, 업무 기획, 자치구 주민
 자치활성화 지속화 방안 연구, 주민자치회 회계 지원”이다.
 주민자치회가 할 일을 동자치지원관이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읍면동장지배에서 이제는 동자치지원관의 이중 지배를 받고 있다.
 동자치지원관에게 지원되는 것을 주민자치회에 직접 지원하라는 요구가 많다.

4-2 행안부가 권유하고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
 씌해 주세요.

동자치지원관을 본인은 이전부터 복지매니저라고 칭한다.
 오랫동안 복지매니저가 지역사회를 두루 살필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동 산하단체 등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사람이 적격이
 라고 판단했던바 동차지지원관의 명칭을 사용한 인원은 필히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지원관의 보수 및 직무 등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
 록 함이 좋을 것이다.

5. 주민자치회법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5-1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관련하여 조항을 신설하였

습니다.¹⁾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중 제25조(주민자치회)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발휘가 되어야겠으며 다수의 국회의원이 협치를 하여야하나 그 무엇보다도 시민의식의 함양이 뒷받침 되어 반드시 따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수의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스스로가 생존해 남으라는 것과 여러 형태로의 사업과 정부의 뒷받침 하에서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 등을 담보로 추진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5-2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²⁾을 제정하여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본 원안이 통과된다면 재정, 인사, 자율성이 첩외하게 보장이 되나 앞서 말해왔던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어 지도록 함이 타당하다.

또한 진정한 국민주권주의 도래하는 것은 사실이니 이 사회와 국가가 더욱 대의민주주의가 될 것이며 정치/경제/사회에서 진보하게 될 것이다.

6. 끝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 젊은 인재영입 및 여성비율확대 필요하다.

영입이 되었다면 수평하고 평등한 대우가 원칙이다.

하나 거버넌스적인 연대와 견제와 균형을 바란다.

점진적인 미래는 과거의 연속이니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했노라고 다시 담금질을 해보자.

모두가 yes 라고 할 때까지 주민이 공감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국민 주권주의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5조(주민자치회)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2. 읍·면·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면·동장과의 협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회원 중에서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2)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의 읍·면·동 안에서 주민이 지역적인 공동활동을 함께 하며 자치할 수 있는 적정구역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주민”이란 마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란 마을을 단위로 설립되어 해당 마을의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회원”이란 주민자치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으로 회원의 자격과 구분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가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민자치회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주민자치회의 설립 등) ① 주민자치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마을 주민의 5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창립총회의 의결은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사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1조에 따른 주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로 분할하거나 다른 주민자치회와 통합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주민자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으로 하고 있는 마을
4. 사무 및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회원 자격과 구분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의결정족수 등 회의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7조(설립인가) ① 제5조제1항의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14일 이내에 시·군·구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항 후단에 따른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③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군·구의 장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자치회 임원) ① 주민자치회는 대표자 1명과 감사 2명을 두고, 선출 방식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임원의 구성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대표자의 직무 등) ① 대표자는 주민자치회의 모든 사무와 사업에 대해 주민자치회를 대표한

다.

② 대표자는 정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주민총회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③ 대표자는 대표자의 이익과 주민자치회의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0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계의 감사와 직무의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는 회계나 직무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주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대표자가 그 기간 이내에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②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 정관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의 회원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주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대표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의 사무 및 사업은 정관에서 대표자 또는 직원들에게 위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주민은 누구나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의 특정 구성원과 관계가 있는 의결의 경우 그 구성원은 표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비치 서류)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재산 목록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 주민자치회는 회비·기부금·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재산 및 시설 보유) ① 주민자치회는 그 목적에 따른 사무 및 사업을 위하여 재산 및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운용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해산) 주민자치회는 회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산한다.

제16조(주민자치회 협의체) ① 주민자치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대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 간의 소통·협력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협력을 위하여 읍·면·동, 시·군·구, 시·도 또는 전국 단위의 주민자치회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7호 중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을 “주민자치회(「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을 각각 “주민자치회 임원”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을 “주민자치회 임원”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